

한·일, 이번엔 ‘지소미아 왜곡 발표’ 진실공방 양상

韓 “일본 정부에 항의해 사과 받았다”

日 “사전조율 뒤 발표...사과 안 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관한 자국 발표가 왜곡됐다는 한국 측 비판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쳤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일본 측이 한국의 항의에 사과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당국자가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양국 간 진실공방으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지난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관련한 일본 정부 발표에 왜곡된 부분이 있어 “일본 측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간부는 2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또한 지소미아와 대(對) 한국 수출규

제에 관한 자신들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측 지적에 맞서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산성은 전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과 의견을 나눈 직후인 22일 18시7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관련해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 및 개별 심사대상 3개 품목 취급에 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며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NHK에 따르면 경산성 간부는 “22일 기자회견 뒤 한국 측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줬다”면서 “(우리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측 주장은 유감이

다. 이대로는 신뢰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산성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의사를 전달한 지난 22일 오후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무역관리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다 부장은 앞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접적 배경인 수출규제 강화조치, 특히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 “변경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당시 ‘일본 정부가 수

출규제를 7월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었지만, 경산성 발표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진 것이다.

일본 측은선 이후 “지소미아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전혀 별개”(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란 주장이 다시 나왔고,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일본이 한국에 양보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등의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한민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하며 ‘맞불’을 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22일 밤 12시(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같은 날 오후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재통보했다.

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실에서 회동을 갖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3당 “오는 29일 본회의 열기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5일 회동,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정실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에서 비정범법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안,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매일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회동을 개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27일 또는 28일에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운영위에서는 국회개혁 관련 국민동의청원규칙,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과 인사청문제도개선 특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당 원내대표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보와 외교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에게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 2일까지로 법정 시한이 정해진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헌법 사항”이라며 “의장이 공식으로 부탁한다.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YS 추모 4주기 행사서 쏟아진 한국당 비판...“씩은 물통”

홍성걸 교수 “씩은물 못버리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추모 행사에서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의 시대 정신과 오늘’ 행사에 참석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치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은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한국당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한국당 의원)을 모두 버릴 것이다”며 “그 이후는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민은 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다”며 “씩은 물이 가득 찬 곳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물이 맑아지겠는가.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밥그릇 지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면서 국민을 설득한 적 있는가”며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제시한 적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정치에서 국민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의 시대정신과 오늘’ 추모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감동시킨 적이 없으니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감동을 주지

못한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희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정수 확대 주장 손학규·심상정, 정계 퇴출시켜야”

“철밥통 정치인 때문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욕먹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론을 제기한 손학규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겨냥,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 정수 330석으로 늘리는 심 대표보다 손 대표는 한술 더 뜬다. 360석을 거론한다”며 이

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청년들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어 온 나라가 아우성인데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자는 것은 너무 엄치없는 주장”이라며 “국민 생각하지 않고, 정치 철밥통만 집착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도매금으로 욕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에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정치인들 모두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선거법 논의하고 다투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 저도 국회의원 숫자 확대 금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